

‘연포탕’ 앞세워 외연 확장나선 김기현 “네거티브 안할 것”

(연대·포용·탕평)

불협화음 높아 국민 우려 목소리 당내분열 획책 정당화 할수 없어 연포탕 정치로 통합 만들어 낼 것 미래 위해 건설적 논의·토론 집중



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과 통합 메시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/뉴스1

국민의힘 3·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기현 의원이 최근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. 김장연대(김기현, 장제원)로 윤심(尹心, 윤석열 대통령 의중)을 잡아 지지층 결집에 나선 김 의원이 ‘연포탕(연대·포용·탕평)’ 전략으로 외연 확장도 노린 모습이다. 전당대회에서 ‘결선투표 없는 과반 득표’로 당선을 노리는 전략인 셈이다.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“요즘 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보다는 싸우는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린다며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.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 대표 후보로서의 책무”라며 “연대와 포용, 탕평(연포탕)의 정치로 총선 승리를 위한 ‘국민 통합의 가치’를 올리겠다”고 했다.

‘연포탕’ 정치를 통해 국민의힘이 중도로 외연 확장하는 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“당내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. 연대·포용·탕평, ‘연포탕 정치’를 통해 당의 화학적 통합을 만들어 내겠다”는 약속도 했다.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한 거센 비판과 당권 주자 간 경쟁이 과열되는

분위기로 흘러가자 김 의원은 “다른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 되, 뜻과 방향을 같이할 수 있는 분 모두와 폭넓게 연대해 나가겠다”고도 했다. 당권 주자 간 과열 경쟁 때문에 전당대회가 내용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. 이와 관련 김 의원은 “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취하지 않겠다. 오직

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와 토론에 집중하겠다”며 “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이야기하겠다”는 약속도 했다.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의원은 “통합을 위해 나경원·유승민 전 의원과 만날 수 있느냐”는 질문에 “상대방이 있기에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”면서도 “우리 당 소속뿐 아니라 우리 당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과는 언제든 누구라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통합의 길을 걷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”고 답했다.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때 특정 계파 인사들에 대한 배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.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다. 이에 대해 김 의원은 “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계파를 앞세우지 않을 것이며,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당 운영과 공천을 할 것”이라고 약속했다. 이 밖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

속한 ‘공정과 상식의 회복’과 관련 ▲부정부패 비리 카르텔 혁파 ▲사법시험 제도 부활 ▲각종 채용 특혜제도 대대적 정비 ▲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▲일부 강성 귀족 노조 등 기득권 세력 혁파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. 그러면서 “대한민국의 꺼져버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되살려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역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·연금·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다만 김 의원이 ‘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을 것’이라고 약속한 것과 별개로 친윤(親윤석열) 중심으로 나 전 의원 비판을 이어가면서, 외연 확장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. 안 의원이 같은 날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“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”며 이른바 수도권 연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도 김 의원 외연 확장 전략에 걸림돌로 꼽힌다. /최영훈 기자 choiyoungkr@metroseoul.co.kr

“5·18정신은 화해·통합... 진정한 국민통합 이룰 것”

輿 比대위, 설 앞두고 호남행 첫 일정 5·18 민주묘지 참배



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·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. /뉴스1

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호남을 찾았다. 당 지도부가 호남에 방문한 것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광주 시청에서 가진 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’ 이후 6개월 만이다. 정진석 비대위는 호남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5·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. 5·18 민주묘지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지난해 5·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방문한 이후 8개월 만이다.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“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은 산업화와 민주화”라며 “5·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기둥에 가치를 담았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”고 했다.

이어 “5·18정신은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라고 감히 생각한다. 며칠 전 5·18(단체) 핵심 회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5·18 당시 광주에서 순직한 군경 모역을 참배했고, (이는) 43년의 비극을 끌어내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”이라며 “국민의힘, 윤석열 정부는 그 정신을

이어가겠다”고 강조했다. 당 지도부는 민주묘지 참배를 마치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·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도 가졌다.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“5·18 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집권여당이었던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

정했다. 윤석열 정부는 ‘국민 통합’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”고 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·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 전원, 주요 부처장관,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민주묘지 참배에 나선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“진정한 국민 통합은 먼저 5·18 민주영령이 일구고자 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야 하고,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정 위원장은 광주·전남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한 뒤 “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”라며 “첨단산업 창업도시 광주, 지중해를 능가하는 세계적 관광도시 전남을 집권여당이 국민의힘은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.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던 평화와 활력있는 광주·전남을 만들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”고 강조했다. /최영훈 기자

‘UAE 적’ 尹 발언 논란 “한-이란 관계 악영향 우려”

국회 한국-이란 의원친선협회가 19일 미국 대(對)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로 어려운 한-이란 관계가 윤 대통령의 ‘아랍에미리트연합(UAE)의 적은 이란’이란 발언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면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. 올해로 수교 61주년을 맞는 한국과 이란은 지난 2018년 미국의 대(對)이란 제재 복원으로 한국이 이란에 취할 석유 수출 대금 70억달러가 동결된 상태다. 한-이란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최근 들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간 평화로운 관계가 무르익어가는 마당에, 제3국의 대통령이 불쑥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”며 “더구나 아랍에미리트 주둔 한국군 장병들이 오해받아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,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발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“윤 대통령 발언의 진이가와 같다면, 정부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진솔한 자세로 이란 측에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김 의원은 “이번 기회에 국내 동결 이란자금 문제의 해결, 국제 제재와 무관한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”며 “한-이란 관계의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면, 국회 차원에서 양국 의원 간 교류 확대 및 정책 지원 등 적극적인 의원 외교에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”고 했다. /박태홍 기자

“이태원 상권 초토화...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라”

민주 “尹정부 소극적 태도” 지적 임대로 부담 완화 대책 등 촉구

지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 용산이태원참사사고수습단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“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세 달이 다 되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으며, 상권은 초토화됐다.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 참사 현장에서 눈물을 삼키며약전고투하신 분들”이라며 “국민 모두가 이 참화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다”고 말했다. 남 의원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이 코

로나19에 이어 10·29 이태원 참사라는 또 다른 재난에 직면했다면서 “코로나 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“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‘재난관리기금’을 10·29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’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

또한 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지역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역할과 매뉴얼을 보강하고 임대로 부담 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·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”며 “윤석열 대통령의 ‘임대로 반값’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적용할 것을 요구한다”고 제안했다.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먼저 대출해주면 임대로의 반값을 상환면제하는 ‘반값 임대표 프로젝트’를 공약한 바 있다. /박태홍 기자 pth7285@